

## 대북경수로 지원과 남북통일

이 승 구

과학기술처 안전심사관

**언**젠가 우리나라 국시(國是)가 통일(統一)인가 혹은 반공(反共)인가를 놓고 열띤 토론의 장이 펼쳐졌던 기억이 난다.

그 결론이 어떻게 맺어졌는지 기억할 수 없으나, 이 두가지 주제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에게나 공(共)히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싶다.

특히 통일이란 주제에 대해서는 그 절실함에 가슴이 매인다.

통일은 해방 이후 반세기에 이르는 남북분단과 이념·체제의 단절속에서도 우리 마음속에 계속 품어온 희망일 뿐만 아니라, 북녘동포의 마음속 한구석에도 잠재시켜 놓은 바램일 것이다.

매년 연말이면 통일을 기원하는 크리스마스 트리가 전방고지에 세워지고, 꿈에도 그리던 고향에 한발짝이라도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이북 5도 출신 실향민들은 줄지어 찾아가 통일을 기원한다.

이러한 통일을 이루기 위해 정부에서는 70년대 이후부터 남북적십자회담 등 공식·비공식적인 접촉을 통하여 간헐적이거나 북한과의 접촉을 시도하여 왔으며, 90년대에 들어와서는 남북고위급회담을 통하여 「남북교류와 협력에 관한 기본합의서」 및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성사시켰다.

몇년 전에는 북한이 우리나라에 수해물자를 제공한 바 있으며, 얼마전 우리나라에서도 북한에 쌀을 지원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물자가 제3국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수입되기에 이르렀다.

북한과의 물류(物流)가 어느 정도 자유로워졌다는 것만으로도, 오고가는 물자에 무언가가 실려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가 통일에 대한 바램과 맞물려 우리는 마냥 신나했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가지 물적교류에도 불구하고 인적교류는 제한된 선을 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며, 이러한 언제 단절될지 알 수 없는 간헐적 접촉으로는, 고향땅을 생애 한번만이라도 밟고 싶다는 실향민들의 여망을 성취시키기에는 아직도 갈 길이 먼 게 아닌가 싶다.

우리나라 원자력산업의 본격적인 시작은 고리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건설과 동시에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본다.

당시 우리나라의 원자력기반기술은 미미하기 이를 데 없어 원자력발전소 제작·건설 및 심지어 검사까지도 상당부분을 외국기술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원자력산업은 규모면에서 뿐만 아니라 내실로도 상당한 경지에 이르렀다고 자부할 수 있게 되었다.

수치적인 원전의 갯수나 원전건설에 대한 국산화율을 논하지 않더라도, 원자력이 산업의 원동력인 전력의 공급에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다는 사실과, 한때는 우리가 정외의 두 등 중 한 등이 원자력전기로 추당되었다는 사실을 부인할 사람은 없다고 본다.

산업적 측면에서 「한국형 경수로」를 자력으로 설계·건설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으며, 상당한 기술력을 요하는 부품에 대해서도 자력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

많은 국민들의 왜곡된 인식으로 인하여 원자력산업이 공해산업으로 이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인고하며 기술력을 축적해 온 원자력산업이 통일의 물꼬를 틀 가능성이 있게 된 데 대하여 원자력가족의 일원으로서 큰 자부심을 느낀다.

”

뿐만 아니라 북한에 제공될 한국형 경수로의 최신설계와 안전기준을 채택하여, 성능이나 안전면에서 세계최고의 수준에 이르러, 북한에 대한 경수로 지원만이 아니라 중국·동남아 등지에 수출을 고려할 정도가 되었다.

이러한 기술적인 성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원자력사업의 전망이 그리 낙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감정에 호소하는 반핵운동과 소위 지역이기주의라 불리는 NIMBY(Not In My Back Yard) 현상 등으로, 근 20년간 안전하게 운영되어온 원자력시설이 갈 곳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사회의 원자력안전에 대한 예민한 반응 등으로 부지확보가 어려워 그 점유율이 점차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얼마 전 미국원자력학회에서 회원들에게 일일이 스티커를 보내온 적이 있다.

스티커에는 'Another Environmentalist for Nuclear Power'라 적혀 있었다.

말하자면 원자력은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산업이 아니라 오히려 환경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즉 원자력 하는 사람들은 비환경론자가 아니라 오히려 원자력을 찬성하는 또 다른 환경론자라는 것이다.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의 환경운동은 원자력을 공해산업으로 분류하는 데 그치고 있어 아쉬움이 남는다.

많은 국민들의 왜곡된 인식으로 인하여 원자력산업이 공해산업으로 이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인고하며 기술력을 축적해온 원자력산업이 통일의 물꼬를 틀 가능성이 있게 된 데 대하여 원자력가족의 일원으로

서 큰 자부심을 느낀다.

현재 '남북한쌀지원협상'이 단절된 상태에서 북한과의 유일한 접촉은 KEDO(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현재 진행중인 대북경수로 지원협상은, 북한의 핵개발 방지를 위한 한·미간의 긴밀한 공조와 북한의 경제적 대응실리 획득이 맞아 떨어져 얻어진 결과이기는 하지만, 이와 관련한 자본과 기술의 대부분을 지원해야 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형태이든지 북한과의 광범위한 접촉과 대화, 그리고 왕래가 불가피하다.

어쨌든 경수로 1기를 건설하는 데는 향후 약 10년에 걸쳐 수백만명의 고용인력과 수많은 물자가 남에서 북으로 이동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에 제공될 경수로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서는, 원자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안전규제요원도 참여해야 할 것이고, 비상전력 공급을 위해 우리나라 전기가 북한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얼마 전 외국 대사관 직원들과 식사할 때 북한과의 교류문제가 화제로 떠오른 적이 있다.

그들의 한결같은 견해는 북한과 우리나라의 물류는 최소한 10년 이내에 완전히 개방될 것이라는 것이었다.

물론 이러한 견해가 북한에 제공될 경수로와 완전히 무관한 것은 아닐 것이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뉴욕에서 진행중인 경수로협상에 북한이 협력타결을 위해 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하니, 원자력을 통해 보다 진전된 남북관계가 조성될 것을 기대해 볼 만 하지 않은가! ☺